

광복 후 익산지역의 미 군정 활동 사회분야 활동을 중심으로

김귀성*

목 차

- | | |
|----------------|------------|
| 1. 머리말 | 참고문헌 |
| 2. 사회분야 미 군정활동 | <Abstract> |
| 3. 논의 및 맺는말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광복 후 익산지역에서 미 군정 활동(사회분야 활동)을 조명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 군정활동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심화함과 동시에 지역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군정 활동 관련 자료는 미 군 자료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이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얻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 군정 활동 중 일본인의 송환은 관련 법규와 이 지역에 조직된 세화회에 위임하는 한편 전제동포 구호 활동은 임시 방편적이고 열악한 구빈법적 구호사업에 불과했다. 따라서 민간 구호단체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었고 군정이 해외 귀환문제에 대해서도 실행의 주체라기보다는 보조역할에 불과했다. 둘째 의료 보건 활동에서 익산지역은 병원 신설이 미 군정에 제안될 정도로 열악한 데다 미 군정은 DDT살포, 전염병 예방약 수입 및 배당, 전염병 예방주사 실시 및 방역활동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군정활동이 수행되었다. 셋째 교육 관련 미 군정활동은 광복 후 멈춘 초·중등학교의 재개, 일부 사학의 설립 인허가 등을 제외하고 별다른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노동 관련 활동에서는 익산 철도파업

*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E-mail: woosan92@naver.com

에 참여한 노동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한편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뿐 노동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없었다. 다섯째, 정보 및 여론 조사활동에서는 미곡 및 기타 군정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지만 후속 조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끝으로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미 군정기 익산지역의 농지개혁, 적산매각, 경제·사회·문화·종교 등에 대한 통합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주제어 : 미 군정기, 일본인 송환 및 전제동포구호 활동, 보건의료 활동, 교육 관련 활동, 노동 관련 대응, 정보 및 여론조사 활동

1. 머리말

미 군정기관 1945년 9월 7일에 태평양 미 육군 최고 지휘관인 미 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D. MacArthur: 1880-1964)에 의해 내려진 포고령(1945.9.7)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8.15)때 까지 존속된 재조선 미 육군사령부 군정청(USAMGIK)이 지배했던 3년간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를 미군에 의한 점령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¹⁾. 일반적으로 미 군정기는 두 시기로 구분된다. 전반부는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하여 직접통치를 수행한 기간이라면 후반부는 한국인이 임명되어 전면에 나서고 미 군정은 한 발 뒤로 물러서 간접통치를 했던 기간이다. 이런 시대구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²⁾ 대체로 그 기간을 군정의 직접통치기(1945.09.04-1947.06: 약 21개월)와 간접통치기(1947년 06월 이후 후반기, 약 14개월)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미 군정기는 군정의 직접통치기 가운데 16개월(1945.09~1946.12)을 연구의 대상 기간으로 설정했다. 그 배경으로는 1947년 이리 읍이 부로 승격³⁾되고 한국인

1) 오옥환·최정실, 1993, 『미군 점령시대의 한국교육』, 서울: 지식산업사, 72쪽.

2) 김운태, 1992, 『미 군정의 한국 정치』, 서울: 박영사, 175~177쪽에서는 직접통치기와 간접통치기, 미국의 대외정책의 맥락에서 트루먼 독트린 선언 전후기, 모스크바 삼상회의 발표전을 정통성 경쟁기, 이후 신탁통치를 좌우 대립기, 좌우 합작운동과 단일정부 수립기 등으로 구분함.

3) 1947년 2월 20일 과도정부 입법위원회에서 이리 읍이 부(府)로 승격 안이 가결, 통과되어 법률로 공포(법률 제3호, 1947.2.20)된 후 한국인화(Koreanization: 한국인 초대 이리부윤 김병수 임명)가 가속화되어 미 군정은 직접통치에서 간접통치로 전환되고 지역군정대는 전주와 본국으로 재배치되거나 철수됨에 따라 정치, 경제 등 분야에서 직접통치기에 비해 변화가 이뤄짐.

화 정책에 따라 미 군정이 간접통치로 전환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 군정의 출발 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⁴⁾이 있지만 모든 결정권은 군정 지침(MG manual)에 따라 군정활동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⁵⁾. 모든 영역에서 미 군정 활동을 지배한 법적 근거는 포고(proclamation)·법령(Ordinance)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군정법규였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이들이 익산지역의 군정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한미군사(HUSAFIK)』에서는 미 군정을 24군단 전술부대의 작전군정과 지방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⁷⁾. 사실 그 어느 쪽이든 한국 사정에 어두운 군정 참모들은 영어에 능통한 일본인들을 통하여 한국 사정을 배웠다⁸⁾. 그만큼 미 군정이 일본인을 신뢰했다는 것은 1945년 8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인이 영어로 작성한 약 350권의 비망록이 미군정청에 제출된 것이나 익산지역에 파견된 제28군정 중대에도 태평양 연합군사령부에서 통역과 번역 임무를 위해 배속시킨 일본계 사병 2명(나가오:Nagao, James.와 나카마: Nakama, Yoshio) 등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⁹⁾.

미 제24군단의 군정에 의한 남한 점령은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단계는 한반도 진주 직후 장교들로 구성된 정찰팀이 주요 도시에 체류하는 단계로 이는 미군 진주를 알리고 정찰하는 단계(Baker forty)였다. 이어서 2단계는 대규모 전술부대 즉, 제24군단 예하 각 사단 및 24군수 사령부가 각 시·군단위에 파견되어

-
- 4) 예컨대 Hodge 중장이 1945년 9월 4일 미군의 선견 대장으로서 서울에 파견할 Charles Harris 준장에게 한국에 대한 첫 정책 및 지침을 하달했고 그 후 미 제24군단 선발대가 한국에 상륙한 것은 1945년 09월 08일이었으며 조선총독부를 미군정청으로 개칭한 것은 1945년 9월 19일에 단행되었다. 심지어 미군이 한국 점령에 대한 지시 부재가 종료된 시점은 1945년 10월 17일, 삼성 조정위원회(SWNCC)에서 승인된 최초의 기본훈령이 맥아더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 등은 군정의 출발점 설정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미 제24군단 예하 부대(6,740사단)의 실질적인 한국 도착 시기는 1945년 후반부이기 때문이다(6사단:10월 중순). 도 및 시군지역의 지역군정대의 파견은 1945년 11월 20일 전후에 이뤄져 미 군정기의 출발점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음.
 - 5) 전투부대 사령관, 군정 지역 사령관은 각각 작전지역 및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정에 책임을 진다(군정과 민정에 관한 미 육·해군 교범(*US Army and Navy Manual of M.G and Civil Affairs* 1943.12.22), PP. 23~27.
 - 6) 최경옥, 2006, 『미 군정하 국방경비법의 유래와 변천』,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35-2, 294-269쪽. 군정법령에는 포고(Proclamation), 법령(Ordinance),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部令(Department orders), 局令(Bureau orders), 指令(Bar admission), 訓令(Instruction) 一般告示(General notice) 등이 포함됨.
 - 7) 주한미군사령부 군사실, 『주한미군사』, 4장 지방점령, 전술 부대의 군정, 참고. 6사단은 45년 10월 중순쯤 ‘지방 수비’업무를 하달받고 입지에 도착함.
 - 8) Richard E.Lauterbach(국제신문사 출판부 옮김), 1983, 『한국미군정사』, 서울: 돌베개, 19쪽.
 - 9) 『제28군정 중대 보고서』,1945.12.28.

주둔지를 점령하는 단계(Baker forty-one), 그리고 3단계는 완전한 군정 통치를 위해 군정 중대가 시군에 진출하는 단계이다(Baker forty two: MGC)¹⁰⁾.

이렇게 보면 익산지역도 미 군정의 계획단계로부터 2, 3단계를 거쳐 군정청 및 전술 군정과 지역 군정이 지배했다. 지역 군정단 규모는 대체로 장교 13명, 사병 26명이지만 군정 중대는 장교 12명, 사병 60명으로 남한 내에 7개 군정단과 37개 군정 중대(MGC)를 합하여 총 44개 군정 부대가 각 도, 시군에 배치되었다. 익산지역에서 전술 부대에 의한 미 군정의 수행 기간은 전 군정 기간에 해당되지만(약 36개월: '45.09.09.-'48.08.15), 상대적으로 지역 군정은 3개월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주둔했다(1945.11.26~1946.03.01). 전자에 의한 익산지역의 미 군정은 미 제24군단 예하 부대인 6사단, 63연대 2대대에 의해 이뤄졌다¹¹⁾면 후자인 지역 군정은 제28군정 중대가 담당했다.

한편 미 군정기 전라북도 군정단의 도착과 업무 개시는 대체로 1945년 10월~11월 사이에 이뤄졌다¹²⁾. 전라북도의 미 군정은 군정 단장(Lt Col, Ralph F Galloghy: 1945.11.20 전주 부임)과 한국 측 초대 전북 지사로 정일사(鄭一史, 1946.04.04-1947.06.28: 64일)와 박종만(1947.06.29~1948.09.09: 69일)이 차례로 부임하여 수행되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미 군정장관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단 6개월(1945.11~1946.04)에 지나지 않았다. 그 나머지 기간은 한국인 지사와 미 군정이 함께 도정을 수행했다. 마찬가지로 익산지역도 1947년 4월 이후는 한국인 부윤(초대 府尹 김병수)이 임명되어 미 군정과 한국인이 함께 지역 군정 업무를 수행했다. 따라서 익산지역에서 지역 군정의 단독 활동 기간은 약 3개월(1945.11.26~1947.03.01.)에 불과하다.

미 군정청의 도 기구의 개혁(군정법령 제114호: 1946.04.23)에 의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내무국 소속의 학무과가 학무국으로 승격되고 전라북도 초대 학무국장에 윤택중이 임명되었다¹³⁾. 그리고 도 군정은 군정단이, 시·군은 군정 중대가 파견되어 각각 군정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이 전라북도 지역에 도착한

10) 『주한미군사』 1. 임무와 목표지역으로의 이동, 임무.

11) 제24군단 예하의 40사단(부산 및 경상지역 담당), 6사단(전라 및 제주 지역 담당), 7사단(수도권 및 경기 충청·강원 담당)이 남한 내 각 지역을 분할 관장했다. 익산은 6사단의 63연대 2대대가 주둔함.

12) 제29중대 전주에 본부설립(1945.10.21), 56중대 군산도착(1945.10.23), 64중대 남원 도착(1945.10.24), 48중대 전주도착(1945.10.25), 44중대 정읍도착(1945.11.14), 96중대 본부 파견대 전주도착(1945.11.17.), 28중대 이리도착(1945.11.26). 『주한미군사(HUSAFK)』, Part III., Chapter3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Cholla Puk Do, 참고.

13) 김경식, 2001, 『미군정기 전북교육』, 『지방교육사(광주, 전남, 전북)』, 서울: 한국교육사학회, 463쪽.

것은 1945년 10월 21일-11월 26일 사이였다¹⁴⁾. 제 28군정 중대는 1945년 8월 2일 필리핀에서 임무가 개시되었고 제24군단에 배속된 것은 1945년 9월 7일 이었다. 이에 따라 동년 10월 3일 마닐라에서 출발하여 10월 20일에 인천에 상륙했고, 그 다음 날인 10월 21일 전주에 도착했으며, 전주에서 기차로 익산에 도착한 것은 11월 26일 오후 5시였다¹⁵⁾. 제28군정대가 한국에 도착할 무렵 이 부대 구성원은 장교 13명, 사병 47명 총 58명으로 구성되었으나 1945년 12월 11일 당시 익산 지역에 파견된 장·사병은 총 72명으로 구성되었다¹⁶⁾.

미 군정의 정보자료 원천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¹⁷⁾. 이 논문에서 활용된 익산지역의 미 군정 활동 관련 자료는 미군 측 주요자료 네 종류(미 군정의 계획단계:Baker forty의 자료인 *Special Report 115:1945*, 전술 군정 자료인 『G-2보고서』:1946년, 지역 군정 자료인 『제28군정 중대 보고서』:1945.11~1946.04, 『익산지역 여론 조사보고서』:제3차 보고서:1947.09)와 일본 측 주요자료(『朝鮮終戰の記録』 1963, 『帝國陸軍の軍旗』 2018, 『駐鮮三十六ヶ年』 2020) 및 국내·외 선행연구와 언론자료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미 군정 활동의 범주는 관련 자료의 한계와 지역 조건에 대한 고려 그리고 연구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 분야로 한정하였다.

특히 익산지역에 주둔한 제28군정대는 다른 지역군정¹⁸⁾에 비해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고자료를 남겼다. 나아가 익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광복 후 억압기구(일본군 160사단 본부 및 464연대, 미군, 조선경비대 3연대)가 주둔한 점과 교육, 교통의 주요 지역이자, 미군의 제3차여론조사 및 철도파업이 일어난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공간으로 선정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미군 및 일본 측 관련 자료를 비롯한 국내·외 선행연구, 언론자료 등을 통하여 약 16개월 동안(1945년 9월 9일-1946년 12월까지) 익산

14) 『주한미군사』(HUSAFK),PartIII, Chapter3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Cholla PukDo.

15) 『28군정중대 보고서』(군정의 역사), 1945.12.28.

16) 제28군정대는 Crutchfield Eugene B(소령, 부대 지휘관) 등 장교 13명(장교의 연령대는 25세~37세, 군 복무기간은 5년, 계급은 소령 5명, 대위 1명, 중위 6명, 소위 1명),하사관 9명, 사병 50명 총 72명으로 구성됨(『제28군정중대 보고서』,1945.12.28).

17) 방선주, 1991, 『미군정기의 정보자료: 유형 및 의미』, 『한국현대사와 미군정』, 서울:한림대 아시아 문화연구소, 8-20쪽. 해방 직후 미 제24군단 정보과(G-2)는 한인 포로 15명을 선택하여 정보를 획득(1945.08.29.보고)하는 한편, 한인의 자발적 접촉으로 인한 정보획득, CIC정보·간행물·일기 등 입수문서 분석, 암호해독·통신검열·지역사회답사·여론조사 등에 의한 정보로 분류됨.

18) 지역군정 관련 자료 가운데 제28군정대 보고서는 25건(162쪽)으로 춘천의 48군정대(989쪽), 안동의 63군정대(250쪽)에 이어 많은 자료를 남기고 있음.

지역(이리 읍과 익산군)에서 미 군정 활동(사회분야)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역사학자 Gray C. Boyce는 “자료가 침묵할 때 현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¹⁹⁾라고 했지만, 비록 침묵하는 자료 일지라도 여기에 언어라는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다. 일반적으로 미 군정기의 연구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에 대하여 남한 전체의 틀 속에서 다루는 거시적인 접근(macro-approach)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지역에 한정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전남의 사례²⁰⁾처럼 지역 군정에 관한 선행연구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라북도의 미 군정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송정현(2013, 2020), 한규원(1997), 여운모(1987), 박재호(1998) 등의 논문²¹⁾이 확인될 뿐이다. 이 논문은 관련 자료 및 선행연구를 기초로 광복 후 익산지역의 미 군정 활동을 사회 분야에 주안 하여 조명함으로써 동 시기 이 지역에서 미 군정의 사회분야 활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동인으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학 연구(익산학)의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의 한계로 인하여 남겨진 미진한 부분은 후속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를테면 광복 전후 익산지역의 관심사인 적산처리, 농지개혁, 정치, 경제, 종교, 언론 등과 관련된 미시적인 군정 활동에 대한 접근이 앞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2. 사회분야 미 군정활동

1) 일본인 송환과 귀환동포 구호활동

첫째, 일본인 귀환에 관한 활동

광복 후 민사행정 업무는 남한에 주둔한 미 육군 제24군단과 미 육군 군정

19) W W. Brickman, 1949, *Guide to Research in Educational History*, NY: New York Univ. Bookstore, p. 214. “When the sources are silent, the wise do not speak”.

20) 안중철 옮김, 1993, 『주한 미군정 연구』, 서울: 공동체(Mead. E. Grant, 1951,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rea*), G, E, Mead, 1951,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21) 송정현, 2013, 『해방 이후 전북지역의 미군정 활동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한규원, 1997, 『해방 후 전북교육의 발전』, 우석대학교 교육학연구소, 『교육학연구』 4-1, 1-46쪽/여운모, 1987, 『1945년 남원지방의 좌우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석사논문/박재호, 1998, 『미군정기 전북지역 좌우의 활동』,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대가 담당했다. 미 제24군단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해체를 담당했다면, 미 군정 외사과는 일본인의 송환과 해외 귀환동포 문제를 담당했다. 미 군정의 외사과는 난민, 정치문제, 외사 업무를 담당했던 미 군정 기구이다. 미 군정의 귀환대책은 1945년 9월 15일 난민 및 노동자 구호단체(The Relief Organization for Refugees and Laborers)라는 작전명으로 이행되었다. 특히 일본인 송환 대책은 일본군, 민간인, 순으로 수립하되 일본인 조직과 관리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 이 때 미 군정의 승인 아래 일본인 송환업무를 대행한 기구가 바로 세화회(世話會)였다²²⁾. 세화회는 조선총독부와 미 군정청에 의해 1945년 8월 20일 공식 설립되었고 8월 하순-9월 초에 지방에도 설립되었다²³⁾. 당시 전북의 세화회(世話會) 조직은 군산·전주·이리·남원 등지에 설립되어 존재했다. 특히 이리지역의 세화회장은 노리와키 노부오(森脇信夫였다)²⁴⁾였다. 그는 동양척식회사의 목포지점장(1941), 대구지점장(1942), 이리지점장,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 등을 경영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리에서는 세화회 회원과 주민 간에 갈등도 있었다. 이리 세화회 회원인 일본인 제2세 통역과 패잔 일본인들의 음모에 의해 정당한 자진기부를 강탈이라고 미 군정에 허위신고함으로써 미 군정은 이리지역의 인민위원회 관련 인사들을 검거한 사건이 일어났다²⁵⁾. 지방의 일본인 수송문제는 미 군정청과 전라도를 담당하던 24군단의 예하 사단인 6사단과의 연락을 취해 이뤄졌다. 미 군정이 취한 일본인 송환을 위한 법적 조치는 법령제10호(1945.10.08)에 의해 일본인의 등록을 규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남한 사회에서 일본인 송환에 대한 태도는 건국준비위원회의 호양론(互揚論)과 강경 추방론이 각각 대두되었다²⁶⁾. 호양론은 재일동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추방론은 그와 무관하게 대두되었다.

1936~1944년까지 조선에 남아 있는 일본인은 총 712,583명(M345,561+F367,022)이었다²⁷⁾. 전라북도에서도 익산지역에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시기는 대체로 일제 강점기 말기였다. 1940년대에 이리거주 일본인이 4,390명

22) 최영호, 2013, 『일본인 세화회』, 서울: 논형 109~127쪽.

23) 이연식, 2010, 『해방후 남한거주 일본인의 송환문제를 둘러싼 갈등』, 『민족운동사연구』 63, 201~256쪽.

24) 森田芳夫, 1963, 『朝鮮終戰の記録』, 東京: 巖南堂, 390쪽.

25) 《중앙신문》, 1945.12.06, 《조선일보》, 1945.12.06.

26) 노기영, 2006, 『해방 후 일본인의 귀환과 중앙일한협회』, 『한일민족문제연구』 10, 223~245쪽.

27) 1944년 남한 총인구(25,917,881명), 일본인 712,583명-총인구대비 점유율(2.8%), 전북인구 1,674,692명, 전북 일본인 3,068명-도내인구 중 일본인 점유율(4.7%)였다. 森田芳夫, 1963, 앞의 책, 7쪽.

이었다면, 광복 직전까지 익산지역에 거주했던 일본인은 9,963명(익산군 5,704명 이리읍 4,259명)이었다²⁸⁾. 이리 읍장 및 연맹 이사장을 역임하고 일본인 송환이 마무리되던 때까지 이리에 남아 있었던 오하시 소쿠조(大橋即淨)는 1945년 11월 27일 이리에 주재한 일본인 3천 명이 최후의 송환이었다²⁹⁾고 진술했다. 이렇게 보면 1944년 전후 전북에서 익산지역은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 지역(전북에서 익산거주 일본인 점유율 30.1%)이었다. 광복 전 익산지역에 주재한 일본군(160사단 본부 및 464연대: 1945.5.28. 14시-11.2)은 광복 후 대부분은 열차로 이리에서 부산으로 이동하여 선박을 통해 일본으로 돌아가는 한편 민간인들은 부산항과 지역의 인근 항구(군산, 줄포 등)를 통해 선편으로 송환되었다³⁰⁾.

1945년 08월 23일-12월 29일까지 익산지역에서 열차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송환된 일본인은 1,622명이었다³¹⁾. 대체로 일본인의 송환 순서는 군인, 소집해제 및 제대군인의 가족, 경찰, 神宮, 광산관계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자, 공무원, 산업종사자, 군정청이 요청한 교통, 체신업 종사자, 수송업무 종사자 순이었다. 그러나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중요 물자를 소지하고 일본으로 송환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동 청년대원이 항구에서 일본인 화물을 풀어 그 내용을 검사했고, 이런 절차를 통해 송환이 이뤄지는 과정에 서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1945년 12월에 대부분의 일본인 송환이 이뤄졌다. 다만, 그때까지도 이리에 체류한 일본인은 50명(전북: 418명)이었다.³²⁾ 그 밖에 이리농사시험장의 직원이 1946년 12월 02일까지 잔류하기도 했고³³⁾ 이리세무서장도 같은 기간까지 잔류할 정도였다.

둘째, 전재동포 구호활동

1945년 08월 05일~1947년 07월 24일까지 해외에서 조선으로 귀환한 전재민 수는 2,897,057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의 귀환 전재민 수는 200,750명이었다. 그런데 익산지역의 귀환동포 통계를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익산의 불법연구회(원불교) 전재동포구호사업을 비롯한 민간 구호단체의 관련

28) 森田芳夫, 1963, 앞의 책, 9쪽.

29) 大橋北龍, 1987, 『駐鮮三十六ヶ年』, 東京: 大橋文庫(大橋即淨 著, 양은용 역주, 2020, 『조선주재36년』, 익산: 익산시), 114쪽.

30) 森下智, 2018, 『帝國陸軍の軍旗』, 제2卷, 동경: 帝國陸軍史研究會, 59~61쪽/森田芳夫, 앞의 책, 126쪽.

31) 森田芳夫, 1963, 앞의 책, 368~389쪽.

32) 森田芳夫, 1963, 앞의 책, 390쪽.

33) 森田芳夫, 1963, 앞의 책, 422쪽.

구호활동 기사를 통해 어느 정도는 그 숫자를 추정해 볼 수는 있다. 광복 직후 1945년 09월 30일에 조선원호단체 주관 하에 귀환동포 구호사업을 위해 미 군정청에 등록된 단체는 불교, 개신교 불법연구회 등을 합하여 13개 단체였다³⁴⁾. 1945년 12월 15일에 군정의 윌슨중좌는 서울 원호단체 연합중앙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가입한 단체는 13개였다³⁵⁾. 동년 10월 20일에 구호단체의 연합조직인 조선원호단체 연합중앙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이 단체에 16개 단체가 참가하여 조직이 확대되었다. 익산에 본부를 두고 있는 불법연구회에서는 구호단체로써 미 군정에 등록을 하고 이리역, 전주역, 서울역, 부산역 등지에서 전재동포구호사업을 전개했다³⁶⁾. 그러나 불법연구회의 이런 사회 구호활동은 단지 물질적인 측면에서 구호뿐만 아니라 정신적 주체성 확립과 인격수양을 강조하는 교육도 병행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³⁷⁾. 그 밖에 익산 전재동포구제회와 기독교의 구호활동도 확인된다. 이들이 6개월간 활동한 결과, 구제자는 40만 명 이었다고 한다³⁸⁾. 미 군정에 등록된 불법연구회 전재동포구호사업은 이리역전에서 이리후생사업(기간:1945.09.05~1946)이 전개되었는데 그 내력은 다음과 같다. 즉, “급식인원 4백만명, 사망인 1백명, 출생인 20명, 후원지부 총부 임원급학원 30여 명이 출근하였고, 보화당, 이리, 남원 등 10여 개 교당에서 10일씩 교대로 2, 3차 순회하였다. 식량은 당국에서 수급했으며 기타 일체를 전담하였고, 총부 구내 사가에서도 염장보조를 했다”³⁹⁾.

당시 제28군정대의 이리지역 보고서(1946.12.16)에서도 한국구호단체에 의해 16,154명에게 식사 제공과 아울러 침실용 막사가 개인에게 제공되었으며, 신발(263켤레), 담요(151장) 및 의류(604개) 등을 합하여 이상을 물건으로 판매하면 42,635엔, 현금으로는 107,582.20엔에 상당한다고 보고했다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의 구호사업은 임시 방편적이고 수준이 열악하여 구빈법적 구호사업에 불과했다⁴¹⁾. 따라서 미 군정은 전재동포 구호활동을 민간구호단체

34) 《매일신보》, 1945.10.02. 미군정에 등록된 단체 중 익산의 불법연구회(현, 원불교)가 확인됨.

35) 《자유신문》, 1945.12.17.

36) 원불교 정화사, 1973, 앞의 자료, 169쪽에서 경성구호소(1945년 9월 10일-1946년 3월 말), 이리역전의 이리후생사업(기간: 1945.09.05.-1946), 전주후생부, 부산구호소 등을 각각 운영함.

37) 오세영, 2022, 『해방공간 미군정의 전제민구호정책과 민간단체의 역할』, 불법연구회 활동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46호, 174쪽.

38) 《동아일보》, 1946.09.06. 《동아일보》, 1947.02.01, 1947.05.06.

39) 원불교 정화사, 1973, 앞의 자료, 169쪽.

40) 『제28군정대 보고서』(1945.12.06).

41) 박보영, 2005, 『미군정 구호정책의 성격과 그 한계』,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었다. 나아가 군정이 해외로부터 귀환 동포 문제에 대해서도 실행의 주체라기보다는 보조역할에 불과했다⁴²⁾.

2) 전염병 보고 및 의료활동

미군정법령 제21호(1945.11.02)에 의한 조선구호령은 지속되었지만 사회적 혼란과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미 군정 활동은 특정 범주에 속하는 노인, 유아, 질병 기타 곤란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공중보건 활동에 치중했다⁴³⁾. 비록 각 도의 행정기구에 보건후생국(의무과·약무과·예방의학 및 生政科·우생시설과·수의과·후생과)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공중보건 활동은 주로 전염병 방역(주로 전염병 예방주사·DDT 살포)활동과 월남 및 해외에서 귀환하는 동포에 대한 방역에 그쳤다. 당시 남한에는 콜레라, 말라리아, 장티프스, 천연두 등이 만연되고 있었다. 그러나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과 의약품 부족으로 미국으로부터 의약품 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광복 이후 전라북도의 의료현황은 매우 열악했다⁴⁴⁾. 1946년 당시 전북의 의료인 및 병원 현황을 보면 도립병원 3개, 사립 3개(전국 152개 병원의 0.04%), 치과병원 공립 2개, 사립 19개 병원이 각각 운영되고 있었다. 이런 전북의 치과병원 수준은 전국 치과병원 352개 병원의 약0.06%를 점유할 정도였다⁴⁵⁾. *Special Report 115*에 의하면 1945년 전라북도의 주요 의료시설 가운데 이리의 병원과 병상(사립병원 30병상, 개인병원 20병상) 숫자는 전주, 군산보다 더욱 열악했다⁴⁶⁾.

1945년에 상·하수도의 매일 배수량 현황에서도 군산(3,000)·이리(1,800)·전주(1,800)·김제(270) 등⁴⁷⁾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리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했다. 1946년에 여름 콜레라 등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은 당시 위생 상태를 입증해준다⁴⁸⁾. 1946년 01월~09월 사이에 전국의 콜레라 환자

6, 93쪽.

42) 황선익, 2018, 『해방 후 귀환구호운동의 전개와 미 군정의 대응』,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85, 144쪽.

43) 박인순, 2015, 『미군정기 한국 보건의료행정의 전개과정』(1945-1948) 서울: 두남, 172쪽.

44) 전라북도, 1927, 『전라북도 요람』, 전주: 전라북도, 173~174쪽. 일제 후반기에 전라북도의 주요 의료기관으로는 도립병원(자혜의원, 1925년)이 전주·군산·남원에 운영된 바 있고, 사립 개인병원으로는 전주 예수병원(1941), 옥구군에 구암예수병원(1934), 군산 사립군산병원(1943년) 등이 확인됨.

45) 조선통신사, 1947, 『朝鮮年鑑』(1946), 경성: 조선통신사, 273~274쪽/박인순, 1994, 『미군정기의 한국 보건의료행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참고.

46) CINCPAC-CINCPOA, 1945, *Special Report NO 115, KUNSAN-CHONJU(Korea)*. P.55

47) 朝鮮通信社, 1946, 『1947年版 朝鮮年鑑』, 서울: 조선통신사, 275쪽.

발생수 및 사망자 수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숫자와 비율을 보면 환자 2,380명 (16.3%), 사망자 1,591명(16.8%)를 각각 보였다⁴⁹⁾. 특히 전북의 전염병 상황 (1946.2.1~2.15)은 천연두, 발진티프스, 디프스 순으로 많았다⁵⁰⁾. 이어서 전북의 콜레라 감염병(1946.6.16~6.17)보고에서 익산지역은 콜레라 감염자가 3명, 사망자는 2명을 보였다⁵¹⁾. 그러나 동년 07월에 익산군 내 호열자(콜레라) 발생 환자 발생수는 173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58명이 사망했다⁵²⁾. 제28군정중대 보고(익산군 보건:1946.01.19)에 의하면 1946년 초 당시 익산지역의 보건상황을 고려하여 익산군에 공적인 전염병 전담 병원의 개원을 미 군정에 제안한 바 있었으나⁵³⁾ 후속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 군정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 보건후생국의 한국 관련 사항을 보면 결핵예방을 위한 투베르클린 반응이나 X선 검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생산독려, 해충박멸, 보건교육 등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환경위생 보건교육, 검사 등의 노력이 있었다. 이런 노력은 비록 오늘날의 예방의학 수준은 아니었지만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평가를 통한 정책수립을 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군정청의 주요 보건의료 활동에서도 DDT살포 (1945.11~1946.5), 전염병 예방약 수입 및 배당(1945.11.1946.3.4.7,8,1947.3), 전염병 예방주사 실시 및 방역활동(1946.12~1948.07.08)⁵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염병 통제의 노력으로 1947년 11월부터 발진티프스, 장티프스, 천연두 등의 발병율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3) 교육 관련 활동

미 군정의 점령지 한국에 대한 교육정책은 첫째, 일제잔재의 불식, 둘째, 평화와 질서의 유지, 셋째, 생활의 실제에 적합한 지식과 기능의 연마에 두고 있

48) 《동아일보》, 1946. 5.7. 5.8. 5.25.

49) 朝鮮通信社, 1947, 『1949年版 朝鮮年鑑』, 서울: 조선통신사, 340쪽.

50) 박인순, 2015, 앞의 책, 113쪽.

51) G-2 보고서, Periodic Report, No.242, 1946.06.17. 356쪽.

52) 《동아일보》, 1946.07.23.

53) 『28군정대 보고서』(익산군 보건) 1946.01.19. “익산군 병원은 전염병 격리병원으로써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병원을 개원하는데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補修에 거의 8,000엔이 요구된다. 전라북도 또는 국가 차원에서든 어떤 도움이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익산군 보건의 주요 과제이다. 익산군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동물 질환에 대하여 군에 수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의 제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54) 박인순, 2015, 앞의 책, 173쪽.

었다⁵⁵⁾. 특히 교육의 민주화 정책은 일제 식민지 통치체제 하의 교육을 불식시키는 한편 새로운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 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광복 후 미 군정법령 6호(1945.09.29)에 의한 교육의 조치는 조선의 공립 소학교는 1945년 9월 24일(월)에 개학할 사, 6세부터 12세까지의 모든 한국 어린이는 등록할 것, 기타 사립학교의 개학은 후일 지령에 지시함⁵⁶⁾ 등이었다. 이어서 군정법령 64호(1946.03.29)에 따라 학무국을 문교부로 변경하고, 의무교육안을 6년으로 결정(1946.01.26)했다. 이어서 신교육제도의 결정(1946.03.07)에 이어, 초등학교 규정(1946.11), 중학교 규정(1947.05.09) 등이 각각 발표되었다. 광복 직후 전북 학무과에는 한국인 시학인 김희손, 일본인 시학관 오사키(尾崎), 학무과장 데구치(出口)가 남아 있었다⁵⁷⁾. 1947년 시학관, 시학은 장학관, 장학사로 개칭되었다. 일제의 항복 이후 전라북도 교원명부 등 주요 문서는 모두 일제에 의해 소각되어 부득이 교원공제 조합 조합원 명부를 근거로 새 교원명부를 만들었다. 광복 후 군정 도지사에 켈러기 대령, 전북 교육 고문관에 로버트 대위가 각각 부임했고 1948년 3월 김슨(W.E.Gibson)이 임명되었다. 한국인 도지사 정연기는 학무국장에 손종진, 장학사에 조병국·하태웅·김희손·이수남·柳勛錫·宋炳樵 등을 임명했다. 이리, 익산지역에 장학사는 정인섭(이리국교 훈도)이 임명되었고, 이리농림에는 이의배(교유), 이리공업학교 이종표(고창고보, 교유)가 교장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이어서 1946년 4월 손종진 학무과장의 후임으로 윤택중이 부임했다.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9월 24일 개학)와 중학교(10월 10일 개학)가 각각 개교는 했으나 자격있는 교사의 부족이 심각했다⁵⁸⁾.

광복 직후 익산지역의 초등교육 현황을 보면 일제 강점기에 설립된 공립 국민학교가 23개교가 있었다⁵⁹⁾. 이 가운데 일제의 공립심상소학교가 광복 후 국민학교로 개편된 학교는 6개 교였다⁶⁰⁾. 그리고 광복 후 미 군정기에 설립된

55) 손인수, 1992, 『미 군정과 교육정책』, 민영사, 226쪽/오욱환·최정실, 1993, 앞의 책, 141쪽.

56) 정태수, 1992,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상)』, 서울: 홍지원, 818쪽.

57) 송덕수, 1996, 『광복교육 50년. 미군정기편』, 서울: 대한교원공제회 교원복지신보사, 137쪽.

58) 광복 후 전북 도내 초등학교 251개교, 재학생 10만 9,496명, 중학교 14개교, 6,582명이 재학했고 부족교원은 국민학교 500명, 중학교 450명 정도였다(송덕수, 1996, 앞의 책, 141쪽).

59) 익산시사편찬위원회, 2001, 『익산시사』, 익산: 익산시, 1554-1629쪽. 광복 전후 익산지역에 설립된 초등교육기관으로 금마국민학교·여산·용안·이리·용안·계문·팔봉·오산·삼기·춘포·함열·왕궁·낭산·황등·망성·웅북·성당·홍왕·북일·천서·오산남·동산·중앙 등 23개교.

초등학교는 7개교였다⁶¹⁾. 당시 익산지역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중등학교로는 함열중(1947.10.10), 함열중학원(1948.02.24), 함열공립중학교 등이었으며, 사립 남성중학교(1945.12.25)가 인가 신청을 하여 1946년 03월 05일에 인가를 받았고⁶²⁾ 이리중학교(1946.03.01)는 이리중학원으로 각각 설립되었다. 이어서 학제 변경(1946.03.01)에 따라 이리공업학교가 공립 이리공업중학교로, 이리고등여학교가 이리여자중학교(6년제 중학교)로 각각 변경되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익산지역에 존재했던 사립학교(1938년 10개교, 서당 46개)⁶³⁾는 광복 후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 익산군 교육장인 이춘기는 이 지역의 학교가 운영되도록 노력⁶⁴⁾하는 한편 익산군 와리에 사립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신한국회사로부터 적절한 건물을 구매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이 지역 군정 장교의 보고에 의하면 익산지역에서 두 학교 학생들의 스트라이크가 있었다⁶⁵⁾. 이리에서 군정장교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리고등여학교 및 이리농림학교 학생들과 상담을 했다. 1946년 11월 07일 08시, 10시에 시작된 스트라이크가 평화롭게 진정되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더 이상 어려움은 없었다⁶⁶⁾. 당시 전라북도에서 이들 두 학교의 교장 임명과 관련하여 친일교장 배척의 결과로 이해된다⁶⁷⁾. 그 밖에도 이리 학교 어린 학

60) 木原壽, 1928, 『益山郡事情』, 이리: 익산군청, 25~27쪽. 이리·오산·대장촌·황등·함열·여산국민학교.

61) 광복 이후 설립된 학교는 성북(1947.06.05), 삼성(1947.10.21) 등이며, 신흥국민학교(1946.11.25)는 북일학교 동부 분교로 인가되었으며, 미륵(1947.4.3)초등학교가 금마초등학교 미륵분교로 설립, 인가되었고, 석암국민학교(1922.04.01)는 1946년 11월 15일에 팔봉국교 석암분교로 개교하여 이상 7개교가 각각 인가되었다.

62) 『28군정중대 보고서』(익산군 교육), 1946.01.19-이리 남성중학교가 개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설립 신청이 거의 두 달전에 전주에 28군정대의 켈리(Kelly of Teum) 소령에게 전달되었다.

63) 김귀성, 2019, 『일제강점기 익산지역의 교육인프라와 사학운동』,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3, 26~34쪽.

64) 화성농장주 백인기씨와 미망인 이윤성 여사가 남성중학 설립했다는 기사 보도(《동아일보》, 1945.12.13). 이춘기(1905-1989) 대한민국 2,5대 국회의원, 조선식산은행 이리지점 근무, 경성학사 운영(1945), 화성학원 설립(1945)/『제28군정중대 보고서』(익산군 교육), 1946.01.19.

65) G-2 보고서, Periodical Report, No 385, 1946.11.07. 806쪽. 이리여고 학생들이 1946년 1월 07일 오전 8시에 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스트라이크를 벌였지만 군정장교와 만남을 통해 교실로 복귀했다. 그리고 이리농림 학생들이 1946년 11월 7일 오전 8시 교장 물러가라고 스트라이크를 전개했다. 군정장교가 두 학교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학생들과 면담을 한 결과 학생들은 더 이상 시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66) G-2 보고서, 앞의 보고서, No 386, 1946.11.08. 811쪽.

67) 1945년 10월 1일 광복후 초대 이리농림 교장으로 이의배 선생이 임명되었으나 교내 좌익교사들이 선동으로 물의가 일어 재임 1년6개월 만에 군산공립고등여학교로 진출

생들이 공산주의 포스터를 소지한 이념성향의 시위가 있었다(1946.12.12. AM 11:40)⁶⁸). 한편 미 군정은 대한교육원조 형식으로 한국인 도미교육사절단(Korean Educational Commission)과견을 계획하여 전라북도에서도 5명을 선발했는데 그들의 자격여부와 관련한 잡음이 있었다⁶⁹).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미 군정의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익산에 원광대학교의 전신인 유일학림이 개설되었다⁷⁰). 그리고 군정의 인가를 받아 이리공립농과대학이 신설되었다⁷¹). 유일학림은 처음에는 성문대학 인가 신청 및 운영을 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원불교의 영재양성기관인 유일학림의 명칭을 성문대학이라 변경하고 불교과 단과대학으로 대학인가 신청을 추진하는 동시에 그 운영에 있어서는 교수·보수·제반 시설 등 비용을 재단 기업체 운영이율의 반분을 사용키로 했다⁷²). 유일학림은 수업연한을 각 3년으로 하는 중등부와 전문부의 2부 편제로 발족하여 『정전(正典)』을 비롯한 교학과목과 불교학을 비롯한 교양과목들을 아울러 학습하게 하였는데, 중등부 남녀 46명, 전문부 남녀 34명이 제1기로 입학하였고, 그 중 교단 공비생이 21명이었다⁷³). 그 밖에 미 군정의 인허가를 받아 수행된 활동은 아니지만 원불교에서는 한글 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글보급은 해방 직후 구 야학당을 이용하여 총부 구내 아동들에게 국문을 가르치고(이공전 담당), 1946년 1월 중에 각 지방교무를 중앙총부에 소집하고 한글강사(金雲涯)를 초청하여 초등강습을 마치고 각 지방에 가서 문맹퇴치운동에 노력한 바 수강생이 약 4천명에 달했다⁷⁴).

(1947.4) 잠정 수습책으로 문교사회국장 윤택중이 2대 교장으로 겸임발령(1947.4.30.)/ 이리농림70주년기념사업추진위, 1992, 『이리농림70년사』, 219쪽/광복 후 이리고등여학교 교장에는 김상로, 이리공업학교 교장에는 이종표 등이 임명됨(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참고).

68) G-2 보고서, 앞의 보고서, No.426, 1946.12.18, 889쪽.

69) 손인수, 1992,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278-292쪽. 한국인 교육자 100명을 선발하여 미국에 단기 파견하는 계획으로 1946년 03월 13일 서울을 출발하여 약 4개월에 걸쳐 미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음. G-2보고서, No.249, 1946.06.24. 372쪽.

70) 1940년 1월 25일 불교전수학원인 유일학림을 설립코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143쪽) 당국에 의해 불허되었고 1946년 5월 1일 유일학림으로 설립되었다.(『원불교교고총간』, 제5권, 기본사료편, 원불교 정화사 1973, 171, 181, 199쪽).

71) 《영남일보》, 1947.08.29., 《자유신문》, 1947.11.11.

72) 원불교 정화사, 1973, 『원불교교고총간』, 제5권, 앞의 자료, 199쪽.

73) 「원불교 교사」, 111쪽(『원불교전서』, 1370쪽).

74) 원불교 정화사, 1973, 앞의 책, 170쪽.

4) 노동운동에 대한 대응

광복 후 전국적으로 노동자 조직이 등장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전평)를 들 수 있다. 1945년 9월 26일에 경성토건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금속·화학·출판·섬유·토건·교통운수·식료품·철도·연료·피복 등 10개 노조의 대표 51명이 모여서 준비대표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45년 11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대부분 산별노조를 결성하고 마침내 1945년 11월 5일, 6일에 결성대회를 가졌다⁷⁵⁾. 이어서 1945년 12월에 전국적인 종적 조직을 조성하게 되었다. 미 군정이 1945년 9월 8일 한국에 진주한 후 제시한 노동관련 정책 중 중요한 것은 군정법령 제2호(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 제한의 간: 1945.09.25)와 19호(국가 비상사태의 포고)였다. 전자는 일본인 소유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공장관리 운동의 기반을 제약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노동운동 자체를 제약하려는 것이었다. 이어서 군정법령 제97호(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 공포, 노동부 설치:1946.07.23)를 통해 노동조합의 정치적 독립과 아울러 노사문제를 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처럼 노동조합과 미 군정 간에 팽팽한 긴장 속에서 1946년 09월에 총파업을 맞게 되었다. 파업의 직접적 계기는 미 군정 운수부에서 적자타개와 노동자 관리의 합리화라는 이유로 운수부 종업원 25%의 감원과 월급제로 전환하려는 결정이었다⁷⁶⁾. 1946년 09월 15일에 전평은 철도노조와 미 군정청 운수과장에게 6개항의 요구조건을 기한부로 제출하도록 하고, 각 지방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9월 23일까지 요구조건에 성의있는 회답이 없을 때 총파업 결정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년 9월 24일에 부산철도 노동자 7천 여명이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전국적으로 4만 여명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1946년 9월 24일에 일어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서울·경기·대구·부산·전남북 등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확산된 노동운동이었다⁷⁷⁾. 전북은 이리철도 노동자를 중심으로, 전남은 철도노동자, 화순탄광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리에서도 1946년 9월 24일 20시 45분에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이리역 전보실과 조사관실로 이뤄진 역내 철도건물이 미상의 인물에 의해 방화사건이 일어났고 300여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건물

75) 김태승, 1987, 『미군정기 노동운동과 전평의 운동로선』,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318쪽.

76) 김남식, 1984, 『남로당 연구』, 서울: 돌베개, 236~237, 341쪽.

77) 서울·인천·대구·부산·이리 등은 1946년 9월 24일에, 이어서 여수(9.25)·순천(9.25)·완주(9.28)등도 철도 노동자의 파업이 있었음.

주변에 모여 들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불을 끄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 때 역장 이하 간부가 파업에 적극 참가했다는 주장도 있었다⁷⁸⁾. 이리경찰은 철도에 boxcar로 입구를 막으려고 이동시켜 놓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다. 당일 경찰은 파업가담자 10명을 구금했고 63연대의 미 군정과 경찰이 조사 중이었다⁷⁹⁾

이어서 1946년 09월 26일 오전 12시에 이리 철도 노동자들이 작은 규모의 소요사태를 일으켰다⁸⁰⁾. 그 밖의 미 6사단 관할 지역에서도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다가 10월 03일 대구를 제외한 이리·전주·군산 지역의 철도 노동자들이 원 근무지로 복귀했다⁸¹⁾. 그러나 이리 지역 노동자들은 소요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해 근무 복귀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리고 1946년 09월 30일에 하지중장의 철도파업과 관련한 임금 인상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의 라디오 연설이 있었다⁸²⁾. 이런 상황에서 이리 기관차 기술자들이 10월 07일에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10월 10일에 종료했다. 이 파업에 기술자 43명 중 40명이 참여했으나 복귀되었고 이들은 경찰의 구금으로부터 풀려나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이 중에 3명의 기술자(김영직은 주도자로 노동조합원)는 읍내를 벗어나 도주했다. 기관차 기술자들은 노동자들의 식량과 급여 인상을 요구했다⁸³⁾. 1946년 10월 12일 오전 12시에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종식되고 다음 몇가지 조건은 확보되었다⁸⁴⁾. 예컨대 주당 40시간 노동, 월 400원 상당의 임금인상, 현재 100명 이상 고용된 상황에서 식사제공을 위한 식당 설치, 지역로선에 3년, 전 지역에 5년 이상 근무보장을 하는 것 등이었다. 부산은 80% 노동자들이 10월 12일 오후를 기하여 근무에 복귀했다. 비록 익산지역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짧은 기간(약 20여일: 1946.09.24~10.12)이었지만, 1946년 10월 16일에 미 군정은 파업기간에 구금된 두 명의 이리 철도 노동자(김유구·서중홍)를 석방했다. 이들은 이리역 철도 광장에서의 시위와 연루된 인물들로 미 군정은 이들을 석방시키면서 김유구에게는 3백엔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리역 관리들은 그가 공산주의자로 불법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

78) 박헌영, 1948, 『부록2 투쟁일지: 인민항쟁의 피어린 기록』, 『동학민란과 그 교훈』, 해방사, 99쪽, 김무용, 2000, 『해방후 9월 총파업의 지역별 전개와 성격』,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8, 248쪽 재인용

79) G-2 Periodic Report, No.343, 1946.09.26. 629쪽.

80) 앞의 보고서, No.344, 1946.09.27, 634쪽.

81) 앞의 보고서, No.349, 1946.10.02. 650쪽.

82) 앞의 보고서, No.353, 1946.10.06. 671~672쪽.

83) 앞의 보고서, No.366, 1946.10.19. 731쪽.

84) 앞의 보고서, No.359, 1946.10.12. 704쪽.

에 해고할 것을 권고했다.

5) 정보 및 여론조사 활동

미 군정의 익산지역에 대한 정보활동은 대체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CIC, 63연대 순찰팀, 28군정대의 현지조사, 미육군사령부의 현지조사 등에 의해 이뤄졌다. 그리고 *Special Report 115*에서와 같이 일본인 관리들이 소유하고 있던 광복 전의 정보인 ‘조선관련 육해군합동정보연구’(JANIS75:Joint Army-Navy Intelligence Study Korea,1945.04)를 비롯하여 익산지역에 남아 있던 일부 일본인들로부터 얻은 정보도 있었다⁸⁵⁾.

한편 미 군정이 익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여론조사 활동은 1946년 후반부(9월~12월)에 8회 실시한 것과 1946년 8월의 지역 여론조사(이 리보고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간략한 지역여론 조사로써 주제는 주로 군정에 대한 여론과 점령지 및 특별한 주제 중심(미곡)이었다. 1946년도 G-2보고서에 나타난 군정에 의한 이런 지역 여론조사(public opinion on occupation and special topics)가 바로 이를 입증해준다. 대부분 전북에 거주하는 주민(옥구·익산·김제 포함)을 대상으로 하곡수집이 시작되는 시기인 6월 18일~12월 30일까지 군정에 대한 반응, 미곡정책, 차관, 입법의원 선거, 정치문제 등을 주제로 표본 및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1946년 후반에 실시한 지역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령군과 관련된 반응에서 대체로 미·소공동회담 재개는 이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희망적이고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전북 도내 주민의 미 군정에 대한 반감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써 열악한 식량상황, 인플레이션 상황 등과 관련이 있었다.

둘째 1946년 11월 25일에 제63보병 연대에서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특별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 입법의원 선거는 상당히 공정하고 정직하게 치뤄졌지만, 좌익 사람들은 진정으로 피랏밧 모양의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었다. 전북의 입법의원 4명은 우익집단의 대표로써 앞으로 어려움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리고 면접에 응한 50명의 대다수 주민은 미 군정의 미곡공출제도를 강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읍내 공무원들이 이 곡물공출 제도를 선호한 것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곡을 취득할 수

85) CINCPAC-CINCPOA, 1945, *Special Report NO 115*, op.cit, iv.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 농민들이 신한공사에 대해 특히 반감을 갖는 배경에는 신한공사에서 미곡할당량 확정 방식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특히 초기 추정치를 점검하기 위해 미곡의 표본 평수당 수확량에 의한 할당량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좌익은 다양한 농민조합을 통하여 미곡공출제도에 대항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한편 제63보병 연대의 순찰팀의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 사람은 처음부터 2500만 불 차관을 좋아했다⁸⁶⁾.

셋째, 여론조사는 미 군정의 점령지 및 특별주제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주로 미 군정과 미곡정책 등에 대한 지역민의 반응을 묻는 것이었다. 전북지역에서 정치적 경향은 약간 좌익으로 선회하여 미군점령에 대한 반대가 점차 증가해갔다. 아직은 강한 우익 정당이 존재하고 미군점령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완전한 미군점령을 원하며 38선 폐지를 원했다. 다만, 미군점령에 반대하는 것을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다. 도·농간에 미곡정책에 대한 반응도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농민들이 미곡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었다. 미곡이 부족한 원인은 미곡이 수출되거나 미·소 양국 군인들이 앞으로 불안을 대비하여 저축한다고 하는 비난 등 때문이라고 했다, 만일 할당량을 줄여주지 않으면 농민들은 내년 논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까지 말한 바 있다⁸⁷⁾. 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미 군정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미곡공출에 대해서는 도농 간의 차이를 보였고, 차관 및 과도입법의 원 선거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찬반이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미 군정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남한 내의 여론 수집활동은 여러 차례 있었다⁸⁸⁾. 이를 통해 식량위기와 국가통제, 토지개혁, 노동조건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를 확인했다⁸⁹⁾. 그러나 1946년 여름에 실시한 익산지역 여론조사(제3차 지역 여론조사)는 이 지역의 주민 378명을 표본 추출하여 구조화된 면접과 질문지 조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다른 여론조사 활동과 구별된다. 이 여론조사는 주한 미육군사령부 정보참모부에 의해 1946년 8월 20일~25까지 약 6일 동안 실시했다. 그 결과가 바로 『제3차 지역여론조사:전북(익산지역)』(1947.09.03)이다. 익산지

86) G-2보고서, 앞의 보고서(No. 403, 1946.11.25). 859쪽.

87) 앞의 보고서, No. 438, 1946.12.30. 916쪽.

88) 송재경, 2014,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사회동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9-10쪽. 초기의 가두조사에 의한 여론수집여행(1945-1946:주민들 면접·민생·대미인식·군정정책 등)6회, 본격적으로 정기적인 여론조사(1946.2-1946말 전국)26회, 비정기 23회(서울지역)가 각각 실시된 바 있음.

89) 송재경, 2014, 앞의 논문, 62쪽.

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조사팀이 이동교육 열차를 이용하다 보니 교통의 접근성이 맨 먼저 고려되었다고 본다. 아울러 10월 항쟁에 의한 지방여론과 다가올 총선에 대한 정당성 부여를 위한 지방여론 파악의 필요성에 그 배경이 있다⁹⁰⁾. 익산지역 현지 조사는 전시(展示) 및 상영팀과 자료배포 및 조사의 두 개 팀으로 나뉘 이뤄졌으며 조사팀은 20명 가운데 12~13명의 한국인이 참여했다. 군정의 홍보를 위해 배포한 자료는 미국의 대한 외교정책을 담은 세계신보 1만부, 벽보 전단이 2,800부였다. 면담은 마을마다 10명 미만을 선정했는데 익산지역은 여성비중이 (전체 조사 대상자 378명의 30.4%, 115명)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질문지 조사 및 면담 항목은 질문지(8개 항목), 공무원 면담(9개 항목), 일반 면담(3개 항목) 등 총 20개 항목이었다. 표본조사 대상(4개군, 20개면, 60여 개 마을, 인구 285,427명) 가운데 378명을 표본 추출(purposive sampling)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면접·질문지 조사 방법·문항 수·표본추출 등에서 신뢰도·타당도·객관도의 문제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지조사라는 점에서 의미의 무게를 둘 수는 있다. 1946년 여름에 실시한 익산지역 여론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아래 반응 %는 표본집단 378명에 대한 결과치로 제시함).

첫째, 교육과 문해에 대한 응답에서는 적어도 초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M 132명, F36명)이 전체 응답자의 44%를 보여 이 지역의 일제 강점기에 초등교육의 수혜를 짐작하게 해준다.

둘째, 주요 관심사(principal interest)에 대한 응답에서는 식량확보(17%)·미곡수집(16.4%)·조선의 독립(14.8%)·하곡수집에 대한 불만(8%)·농지개혁(3.7%)·김일성 암살(2.9%)·비료부족(2.6%)·미소공동위원회의 진전(1.3%)·필수품의 불공정한 배급(0.5%)·식량운송 시설(0.5%) 순으로 반응했다. 이 가운데 역시 식량문제 관련 응답(약 44%)이 가장 높았다.

셋째,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보다 불만족이 50.8%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반응은 이 지역 주민들의 주된 관심사인 식량문제의 반응 결과로 보인다.

넷째, 지방정부가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비료배분(12.7%) 및 미곡할당은 치밀한 자료(가족수 노동자 수 등)와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정책을 통한 삶의 질 개선(17%), 면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길 원한다(3.7%), 배급의 우선순위는 농민에게 부여할 것(2.1%), 불성실한 공무원의 퇴

90) 조민지, 2015, 『1947년후반기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현지조사와 지방여론』, 한국사학회, 『한국사론』 62호, 7쪽.

출(2.1%), 농민에게 성인교육 강화(1.0%), 정치조직에 강압적 기부 배제(1.0%), 농민회 폐지(0.8%), 농민 세금감면(0.3%) 순으로 응답했다. 이 가운데 미곡할당을 비롯한 경제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약 33%)가 더 높았다. 입법의회에서의 적산토지 정책을 질문에 대해서도 적산토지를 소작농에게 주거나 팔아야 한다는 반응이 전체의 83.9%를 보일 정도로 민감했다.

다섯째, 가장 힘 있는 정당으로는 대한독립청년단(54.5%), 조선건국청년회(31.8%), 대한독립촉성국민회(9.0%), 조선민족청년단(4.5%)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주민의 반응에서 식량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거리를 두었지만, 군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그만큼 익산지역 조사의 주된 관심사는 미곡수집 등 경제문제였다.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의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도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역에서 미곡 수집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좌익과 다른 외적 요인(비료, 수해, 매점매석, 과소비 등)에 떠 넘기는 경향을 보였다.

3. 논의 및 맺는말

이 논문은 광복 후 익산지역의 사회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 군정 활동과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과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추출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 군정 활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한편 지역학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익산지역의 미 군정활동은 전술군정과 지역군정으로 구분해 본다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기간도 길고 자료도 많은 편이었지만, G-2 보고서가 6사단 전 지역 보고서인 관계로 전라북도 내용 속에 익산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었다(약 81건). 따라서 제한된 자료의 한계를 넘어서 향후 익산 지역에서 미 군정활동을 심도있게 탐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요구된다. 나머지 미 군정기 익산지역에서 군정활동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은 후속연구로 미룬다. 여기서는 광복 후 익산지역의 미 군정활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와 시사점을 정리한 후에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익산지역에서 미 군정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미 군정은 점령군(occupied forces)으로써 이 지역에서 군정활동에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한 점이 추론된다. 광복 후 익산지역은 군사도시라고 일컬을 정도로 군(軍)(일본군, 미군,조선경비대)이 차례로 주둔한 공간이었다. 비록 과도정부 입

법의회에서 이리 읍이 부(府)로 승격되고 행정구역개편안이 통과되는 변화는 있었지만, 익산지역은 소작농이 지배한 농촌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좌·우익 정치단체가 공존한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에 도착한 제28군정대의 장교는 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군정활동에 한계가 분명했다. 이들은 원래 필리핀에서 전투부대로써 활동하다 24군단과 군정단에 배속받은 관계로 미처 한국에 대한 사전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주민들과 의사소통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실정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비한 채 강압적인 군정 업무의 수행은 미 군정대와 이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여건에서도 이 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미 군정에 어떤 제안과 논의가 전개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관한 탐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그리고 미 군정 초기에 경찰서 등 각급 기관에 일제 강점기 조선인 인사를 그대로 임용한 점은 지역민에게는 일제 청산이라는 부담을 그대로 안겨 주었다. 한가지 주목할 바는 일제 청산과 관련하여 익산의 중등학교 학생들이 친일 학교장 인사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

둘째, 미 군정기 익산의 억압기구, 자문위원회 등의 성격 및 이들 기구와 지역 주민과의 교호작용은 어떠한가? 광복 후 익산에 주둔한 억압기구(일본군, 미 군정, 경찰, 조선경비대)는 모두 출발부터 전쟁, 귀환, 군정, 치안 등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기구 설립이 지역민과의 의사소통에 의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이리 읍이 부로 승격될 무렵 당시 러치 군정청 장관의 이리 읍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⁹¹⁾를 비롯하여 자문기구조차도 지역 주민과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지역의 좌익은 1946년 6월이면 공식적으로 모두 막을 내리고 지하 운동체로 남는다. 좌익세력은 때로는 민의를 이용하여 미 군정에 저항도 했지만, 적극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미 군정의 여론조사 활동을 통해 확인된 주민들의 반응과 후속조치는 어떠한가? 미 군정은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방의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군정 초기부터 다양한 정보와 조사 활동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진행해왔다. 이 지역에서 미 군정 정책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은 역시 미곡 정책이었다. 그러나 미 군정의 초기 미곡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이 지역 실정에 대한

91) 당시 Lerch 장관은 이리 읍을 세입, 세출의 불균형과 貧寒한 지역으로 인식함(《경향신문》 '47.03.18.

이해도 부족하여 바로 이어진 미곡강매 정책도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웠다⁹²⁾. 미 군정은 이런 미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보다 그 원인을 좌익에 의한 정치적 소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별다른 근본적인 대안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역의 미곡문제는 정치적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이 문제였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좌우익의 정치적인 동향에는 매우 유연하면서도 유독 미곡문제에 만큼은 매우 민감했기 때문이다. 제3차 지역 여론조사 결과에서 미 군정이 실시한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지만 후속 조치는 불분명했다.

넷째, 사회문제에 대한 군정의 대응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광복 후 익산지역에서는 여러 구호단체가 미 군정에 등록을 요구받았다. 오히려 미 군정의 구호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를 떠나 귀환 동포에 대한 민간단체의 뜨거운 구호 활동은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미 군정은 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단체들이 등록하면 구호단체들에게 부분적인 지원에 그칠 뿐이었다. 또한, 이 지역이 역사문화의 고장이자 교육도시임을 인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에 익산지역에 그토록 다수의 사립 교육기관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모두 자취를 감췄다. 물론 특정 사립학교가 군정에 인가를 받는 노력은 확인되었지만, 전북 도내 다른 도시의 그것들과는 대비되었다. 그 밖에 미 군정의 보건의료 활동에서도 예방의학 수준을 넘지 못했고,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대응에서도 노동자들의 일부 요구조건을 수용했지만, 강압적인 조사와 조치뿐 별다른 후속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끝으로 미 군정이 이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농지개혁, 적산처리 등을 비롯한 일제 잔재의 청산과 미 군정에 대한 평가도 과제로 남는다. 점령군으로서 미 군정활동은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또 다른 사대주의를 물려주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이상에서 확인된 사회분야와 관련된 미 군정활동과 논의에 바탕하여 결론을 맺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복 후 익산지역에서 일본인의 송환과 관련한 미 군정 활동은 관련 법규와 이 지역에 일본인으로 조직된 세화회를 통하여 대행되었고 귀환동포에 대한 구호활동은 등록된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부분적인 지원에 그쳤을 뿐 보다 적극적인 구호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92) 1946년 여름 홍수의 피해, 미곡의 수확량 감소, 미곡의 도외반출, 좌익의 저항, 공무원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미 군정이 의도했던 이 지역의 미곡수집 실적이 저조했다. 미 군정은 일제강점기 공출제도와 유사한 신한공사인 하위 기관을 이용하여 공출제도를 시행했다. 물론 이런 기구가 그 임무를 대행한 후 1947년 미곡수집 실적은 반전되었지만, 강요된 미곡정책은 지역 주민의 군정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미 군정의 보건의료 활동은 지역의 열악한 제반 보건의료 여건 속에서 예방의학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수입 의약품에 의존한 전염병 방역에 주력하는 편이었다. 특히 익산지역의 공적인 보건의료기관 설립을 미 군정에 요청했으나 그 후속조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교육분야의 미 군정활동은 관련 법규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의 재개, 일부 사학의 인허가 외에 익산지역의 사회·문화 분야에 군정활동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지역군정은 언어문제, 지역실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부족, 지역 군정의 단기 주둔 등이 이 지역에서 적극적인 군정활동을 전개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장기간 주둔한 전술군정 조차도 주로 치안과 미곡문제에 주력했을 뿐 이 지역의 교육,문화 분야에는 그다지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넷째, 노동분야의 미 군정활동은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에는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미 군정은 철도 노동자의 파업을 치안활동의 차원에서 접근할 뿐이었다. 비록 짧은 기간동안 전개된 이리철도 노동자 파업에 대한 대응에서 미 군정은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수용하는 한편 강압적인 조사와 벌금형을 부과했을 뿐이었다.

다섯째, 정보 및 현지 조사활동에서 미 군정의 미곡정책 등에 대한 지역민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지만 그 후속조치는 불분명했다. 오히려 미 군정은 주민들의 미곡정책 등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나 저조한 미곡수집 실적의 원인을 좌익의 소산으로 돌릴 뿐 보다 근본적인 경제문제에 대한 대책에는 한계를 보였다. 끝으로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미 군정기 전후 새롭게 익산지역의 농지개혁·적산매각·경제·사회·문화·종교 등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제1차 자료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89, 『지방미군정자료집』(2), 서울: 경인문화사.
- 국사편찬위원회, 2014, 『미군정기 자료 주한미군사』 (한국현대사자료총서2: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1-Part 4,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0, 『미군정기 군정단 군정중대문서』 (한국 현대사자료집성: 47),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45, 『미 국무-육-해 삼부조정위원회 SWNCC(State-War-Navy Cordination Committee)』 76,77,78,79,101,115,150,176,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내무부치안국, 1956, 『미군정법령집』(1945-1948), 서울: 내무부치안국.
- 원불교 정화사, 1973, 『원불교교고총간 제5권(기본사료편)』, 이리: 원불교정화사.
- 全羅北道教育會, 1938, 『全羅北道教育及宗教要覽』,全州: 全羅北道教育會.
- 정태수, 1992, 『미 군정기 한국교육사 자료집』 상·하, 서울: 홍지원.
- 朝鮮通信社, 1947, 『1949년판 朝鮮年鑑』, 서울: 朝鮮通信社.
-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참모부 편, 1986, 『군정정보 보고서』 제7,8권, 서울: 일월서각.
-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미군정자료집-시민소요, 여론조사보고서』 (1945.9-1948.6) 자료총서 6, 서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Division of Research for Far East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 1948.06.10., Social and Political Forces in Small Communities in South Korea, Department of State, USA.
- CINCPAC-CINCPAA, 1945, Special Report N0 115, KUNSAN-CHONJU (Korea).
- HQ, Command of US Army Forces in Korea, 1947, Third Field Operation Rural Communities Cholla Pukto, Aug 1947, HQ, CUSAFIK, Office of Civil Information: Seoul, Korea.

2. 단행본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 해방과 건군』, 서울: 국방부, 264쪽.
- 국제신문사 출판부 옮김, 1983, 『한국 미군정사』, 서울: 돌베개. (Lauterbach, Richard E, Danger from the East, NY: Harper & Brothers Publishes, 1946).
- 김경식 외, 2001, 『지방교육사: 광주 전남, 전북의 교육』, 서울: 한국교육사학회, 455-468쪽.
- 김남식, 1984, 『남로당 연구』, 서울: 돌베개, 236-237, 341쪽.
- 김석준, 1996, 『미군정시대의 국가와 행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46-411쪽.
- 김운태, 1992, 『미 군정의 한국통치』, 서울: 박영사, 91-291쪽.
- 김태승, 1987, 『미 군정기 노동운동과 건평의 운동노선』, 『해방전후사의 인식 3』, 서울: 한길사.
- 大橋卍淨, 2020, 『조선주재36년』, 양은용 역주, 익산: 익산시. (大橋北龍, 1987, 『駐鮮三十六ヶ年』, 東京: 大橋文庫.)
- 木原壽, 1928, 『益山郡事情』, 益山: 益山郡廳, 25-27쪽.
- 박인순, 2015, 『미 군정기 한국보건의료 행정의 전개과정』, 서울: 두남, 79-253쪽.
- 박찬표, 1997,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혜숙, 1987, 『미 군정기 농민운동과 건평의 운동노선』, 『해방전후사의 인식』 3, 서울: 한길사.
- 방주선, 1991, 『미 군정기의 정보자료』, 『한국현대사와 미군정』, 서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7-20쪽.
- 森田芳夫, 1963, 『朝鮮終戰の記録』, 東京: 巖南堂, 1-25, 95-152쪽.
- 森下智, 2018, 『帝國陸軍の軍旗』, 東京: 帝國陸海軍史研究會, 49-80쪽.
- 소준열, 주봉규, 1996, 『근대 지역농업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손인수, 1992, 『미 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215-459쪽.
- 손정목, 1972, 『한국지방제도 자치사 연구(하)』 미군정기-1961년, 서울: 일지사.
- 송광성, 1993, 『미군점령 4년사』, 서울: 한울, 78-223쪽.
- 阿部洋, 1987, 『해방후 한국의 교육개혁: 미군정기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연구원, 1-42쪽.
- 안종철 옮김, 1993, 『주한 미 군정 연구』, 서울: 공동체, 81-124쪽. (Mead. E.

Grant, 1951,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rea.*)

- 송덕수, 1996, 『광복교육 50년』, 서울: 대한교원공제회·교원복지신문사, 137-145쪽.
- 오욱환, 최정실, 1993, 『미군 점령시대의 한국교육』, 서울: 지식산업사, 55-140쪽.
- 이광호, 1985, 『미 군정의 교육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2, 서울: 한길사, 494-528쪽.
- 이리농림70년사 기념사업추진위, 1992, 『이리농림학교 70년사』, 이리: 이리농림 70년사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15쪽.
- 이리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2011, 『이리공업고등학교 70년사』 (1940-2010), 이리: 이리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146-150쪽.
- 익산시, 『익산, 도시와 사람』, 익산: 익산관광문화재단, 95-152쪽.
- 익산시사편찬위원회, 2001, 『익산시사』(중권), 익산: 익산시.
- 정용욱, 2002, 『미 군정자료연구』, 서울: 도서출판 선인, ‘참고’.
- 조기안, 2003, 『미 군정기의 정치, 행정체제』, 서울: 아람.
- 정영일, 1992, 『미군정의 농업정책』, 『미군정시대의 경제정책』, 서울: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25-92쪽.
- 정태수, 1992, 『미 군정기 한국교육사 자료집』 상·하, 서울: 홍지원, ‘참고’.
- 최상용, 1988, 『미 군정과 한국 민족주의』, 서울: 나남, 27-66쪽.
- 최영호, 2013, 『일본인 세화회』, 서울: 논형, 27-164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48, 『농지개혁사관계자료집』,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Brickman, William W., 1949, *Guide to Research in Educational History*, NY: New York Univ. Bookstore, p. 214.

3. 논문

- 공병호, 1995, 『미 군정기 한국 교육정책 연구』, 박사학위논문, 名古屋大學 教育 연구과.
- 김귀성, 2019, 『일제강점기 익산지역의 교육인프라와 사학운동』,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권 3호, 26-34쪽.
- 김무용, 2000, 『해방후 9월 총파업의 지역별 전개와 성격』, 『역사연구』 8권, 248-254쪽.
- 김보미, 2014, 『미 군정기 정치적 의사소통 구조와 여론조사』, 『사회와 역사』

103권, 284-314쪽.

- 김수자, 2005, 「해방 직후 미 군정부대의 지방배치와 활동」, 『이대사학연구』 32권, 143-159쪽.
- _____, 2008, 「미 군정의 군정기구 운영과 관료임용정책」, 『향토서울』 71호, 6-31쪽.
- 김우정, 2022, 「1946년 콜레라 유행과 미군정의 방역정책」,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박보영, 2005, 「미 군정 구호정책의 성격과 그 한계」, 『사회연구』 6권 1호, 69-100쪽.
- 박수현, 2021, 「점령기 미 군정의 공보활동과 선전 담론」,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인순, 1994, 「미 군정기의 한국 보건의료 행정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4권, 197-350쪽.
- 박재호, 1998, 「미 군정기 전북지역 좌우익 활동」,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7-26쪽.
- 방선주, 1991, 「미군정기의 정보자료: 유형 및 의미」, 『한국현대사와 미군정』,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8-20쪽.
- 손정목, 2002, 「광복후 미 군정 3년간의 시장들」, 『도시문제』 37권 3호, 65-67쪽.
- 송정현, 2013, 「해방 이후 전북지역의 미 군정 활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_____, 2015, 「해방 이후 전북지역 미 군정 활동」, 『남도문화연구』 28권, 135-148쪽.
- _____, 2020, 「미 군정의 지방 통치 연구(1945-1946)」,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송재경, 2014, 「미 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사회동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신상준, 1976, 「미 군정하의 한국 행정조직에 관한 분석」, 『한사대학 논문집』 6집.
- 여윤모, 1987, 「1945년 남원지방의 좌우익 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오세영, 2022, 「해방공간 미 군정의 전제민구호정책과 민간단체의 역할-불법연구회 활동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46호, 153-181쪽.
- 윤종문, 2018, 「미군정의 조선교육사절단 미국과견과 그 결과」, 『한국민족운동

사연구』 96권, 267-344쪽.

윤홍식, 2017, 「미 군정하 한국복지체제」, 『한국사회정책』 24권 2호, 181-215쪽.

이성근, 1985, 「해방직후 미 군정치하의 여론동향에 관한 분석」, 『국제정치논총』 25권, 119-131쪽.

이연식, 2010, 「해방후 남한거주 일본인의 송환문제를 둘러싼 갈등」, 『민족운동사연구』 63권, 201-256쪽.

조 건, 2017, 「해방직후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 실태와 귀환」, 『한국학논총』 47권, 333-357쪽.

조민지, 2015, 「1947년후반기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현지조사와 지방여론」, 『한국사론』 62권, 353-393쪽.

한규원, 1997, 「해방후 전북교육의 발전」, 『교육학연구』 4권 1호, 1-46쪽.

황선익, 2018, 「해방후 귀환구호운동의 전개와 미군정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85권, 118-143쪽.

허원구, 1991, 「미 군정시대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4. 기 타 신문 및 Website<(열람기간: 2022. 04-08)>

『자유신문』, 『동아일보』, 『군산신문』, 『영남일보』, 『중앙신문』, 『서울신문』.

이리시청, <https://iksan.go.kr>

이리공업고등학교, 이리여자고등학교, <https://school.jbedu.kr>

<Abstract>

**Activities of AMG in Iksan District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Focused on the Social Activity of AMG

Kim, Gui S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on the Social sphere of AMG activities in Iksan district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and it will look forwar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is area, further more I hope it will be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the Regional study. I'd like to sugg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MG's Relief Activity for War Damage Brethren was a merely relief of the poor due to temporary expedient and inferior in level. so there was a limit entrust to civil relief organization. MG's activity was not a main activity for people who return to home from abroad, but only support role for them. Second, In the Health and Medical Activity, Iksan area inferior in health facilities, so MG took a role only scattering DDT, import of vaccination against epidemic and it's allotment, prevention of epidemic activity. Third, In Education Activity, we could not found any more AMG's activities except let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closed reopen after the liberation and they approved some private school, Fourth, In labor activity, MG imposed on fine to railroad labor who participated the strike in Iksan railroad station and also admitted their some needs. Fifth, In the Information and Field survey research activity, There were some negative responses including grain collection and policy of MG by residents of this area. Finally for the following study, I'd like suggest following task needs to be solved by micro-approach on activitiy of AMG in Iksan area: Reform of Farm land, Sale of Japanese Properties and Economy, Society, Culture and Religions etc.

Key Words : Period of AMGK, Sending home of Japanese and Relief Activity for War Damage brethren, Health & Medical Activity, Education Activity, Labor Activity, Information and Field Survey Research Activity

* Emeritus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